"광주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시민단체 성명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수익 위한 아파트 건설 목적·난개발 우려"

광주 북구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예정 구역을 놓고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도심 활성화·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북동 구역은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근거를 지역 낙후성으로 삼았지만, 정작 북동 구역의 상업 기능·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동 구역은 2030 도시기본 계획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위상 제고'를 목표로 지정된 지역이다. 고층·고밀 주택 건설 사업장이 아닌 문화 도시에 걸 맞는 도시 재생 사업이 구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광주시와 북구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여부 회신이 50%에 그친 데다 반대 민원도 적지 않지만, 정비 구역 지정 사전 절차(경관 심의)를 밟고 있다.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 건물 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을 토대로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건설업계의 수익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주민 삶의 쾌적성 강화, 도시 기능 활성화, 도시 여건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선미기자

광주도심.

청탁성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직위 유지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

구청장 당선 전 공무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던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 구청장은 '현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판 직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주범에게 범죄 이익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선 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연퇴직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7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무를 유지한다. 이슬비기자

'코로나19 확산 빌미 취임식' 완도 금일읍장 직위해제

면장 2명은 주의 조치

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취임식으로 논란이 된 전남 완도군 금일읍장이 직위 해제됐다.또 같은 시기 취임식을 가진 면장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완도군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방역예방수칙 준수와 책임관리를 소홀히 한 금일읍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광주 지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으며 이 곳에서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수산물가공공장 외국인근로자 등 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완도군은 금일읍 전체 주민 3740여명과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냉수 주고 받는 의료진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13일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시원한 생수를 주고 받고 있다.

붕괴참사 원청 대표, 경찰서 "불법 재하도급 전혀 몰라"

관리·감독 부재 책임 범위 규명에 수사 집중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대표이사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묵인·방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실 철거 공정, 안전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재개발지 철거 공정의 재하도급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대표이사는 경찰에서 "전국 공사 현장이 50~60개 있어 기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잘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동 재개발 4구역 일반건축물·석면 해체 공정 전반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 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 등 3개 업체)로 파악됐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만한 사고 예견 가능성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이 지난 3월 전후부터 수개월 동안 철거 현장에 상주했던 점으로 미뤄 보고 체계와 원청사의 안전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뿌리는 물의 양을 2배로 늘림) 지시를 했다'는 하청사 대표의 진술이 나온만큼, 경찰은 각종 법령과 철거 계약 내용을 두루 살피고 있다.

철거 공법상 문제, 살수량 급증이 철거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청업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감독을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 불법 재하도급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면밀하게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선옥기자

영광 갯벌서 게 잡던 80대 급류 휩쓸려 숨진 채 발견

전남의 한 갯벌에서 게를 잡다가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18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영광군 백수읍 한 바다에서 A(8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29분께 A씨는 인근 갯벌에서 게를 잡던 도중 물에 휩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가 곧바로 "남편이 급류에 휩쓸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광=서희권기자